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 비전 모색

市·시의회·사회복지학회 공동 주최 정책포럼

'계획은 행정, 실행은 민간' 혁신적 모델 주목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사점을 짚고 향후 국가 돌봄 정책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광주시는 13일 "광주시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공동으로 '광주시, 통합돌봄의 새로운 장을 펼치다'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복지 분야 국내 최대 학회인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정규 포럼으로 학회가 지자체 단일 사업을 전국 규모 포럼 주제로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열린 포럼에는 전국에서 모인 학계 인사와 보건복지부, 부산·충북·경남 등 지자체, 광주시 자치구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 통합돌봄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통합돌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인데, 광주시에서 '행정이 돌봄을 계획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선도적 체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 정보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플랫폼 개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제에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

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2019년부터 4년간 보건복지부 주도로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 커뮤니티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위원은 통합돌봄의 성공 조건으로 ▲돌봄 전담부서(인력) 확보 ▲분층분반 서비스 확충 ▲사례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하고 "이미 이 조건들을 확보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선행연구와 국가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에 이어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과의 이인희 안산시 지역통합돌봄팀장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수완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 권현정 영산대 교수, 오단이 강남대 교수,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교수,

윤종성 광주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 참여했다.

강기정 시장은 "매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기존 돌봄 제도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와 빈틈이 많았다"며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서로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 민주주의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성공시켜야 하고, 이 성공은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보편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그 길까지 꼭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류미수 광주시복지건강국장이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포럼'에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균형위 '지방분권형 국가경영' 용역 착수

우동기 위원장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및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 용역은 KDI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한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지방자치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해 연구 용역 전반에 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조연과 자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아갈 계획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현장담당자, 공청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지방시대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보도육교 안전관리 미흡 9건 적발

광주시, 66곳 안전감찰...자치구에 행정처분 요구

광주시는 13일 "지난 4월21일부터 한 달 간 보도육교 66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안전점검 미흡 등 총 9건의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지난 1월 서울에서 발생한 도림보도육교 처짐 현상과 관련해 지역 보도육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설물의 준공 시기 등 노후도·위험성을 고려해 정밀 점검이 필요한 육교 시설은 민간전문가(토목분야)와 함께 조사했다.

광주시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육교시설의 기초자료를 활용해 육교시설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절차 이행 여부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체계 운영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키지 않은 9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했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은 "보도육교는 시민 이동의 기본 시설물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전남지역 해수욕장 내달 8일부터 개장

道, 17개 유관기관 협의회...안전 대책 등 점검

전남지역 해수욕장이 오는 7월8일 보성 울포솔밭 등 12개소 개장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7월8일 개장하는 도내 해수욕장은 목포 외담도, 보성 울포솔밭, 완도 신지명사십리, 여수 9개소(만성리·방죽포·장동·모사금·무솔목·안도·거문도·웅천·남도) 등 총 12개소다.

나머지 4개소는 순차적으로 개장 예정이다.

전남에는 총 66개소의 해수욕장이 있

으며 올해 56개소가 문을 연다.

보성 울포솔밭 해수욕장은 오는 8월27일까지 가장 기간인 51일간 운영한다.

지난해엔 해수욕장 56개소를 개장해 55일간 운영했으며 65만명의 이용객이 다녀갔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여름 휴가철에 앞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수욕장 안전 대책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목포시 등 12개 시·군과 소방본부, 서해지방경찰청, 전남도 관련

실·과 등 17개 관계 기관이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또 지역 물가, 위생, 수질관리 등 분야별 이용객 편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수욕장 이용객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경기자

▶1면 '日오염수 방류'서 계속

현재 전남 곳곳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피해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힐 때 사용한 물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시켜 해저터널로 후쿠시마 해안 1km 밖 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다.

오염수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은 완료된 상태로 사실상 방류만 남겨둔 상태다. 방류 시점은 이르면 7월 초로 예상된다.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

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 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결정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 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인·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문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적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화순읍 대단지 아파트입구 빌딩부지를 급처분합니다.

- 1) 주거1종 대지1,505㎡
- 2) 2차선 도로변 앞면넓음 직사각토지
- 3) 유동인구 많음
- 4) 지상물 전무 내대지 바로 건축 가능
- 5) 병의원, 쇼핑센터, 오피스텔, 주차빌딩등 다용도부지
- 6) 매매가: 원매자 상담후 시세이하 [급급처분]합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8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